

‘CVC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조성... 개방형 혁신 촉진

(기업형 벤처캐피탈)

산업부, 내달까지 운용사 모집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서
대·중견기업-중소 협력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펀드가 8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VC 스케일업 펀드’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투자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다.

산업부는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과 함께 국내 산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CVC 모기업들은 중소기업

에 자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신제품 공동 개발, 납품·협력사로의 편입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우리 산업의 개방형 혁신에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3월 총 121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 펀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00억원을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 이상 결성이 목표다. 주요 투자대상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산업기술전략투자분야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CVC 펀드 특성에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외에도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피투자기업의 지원과 연계하는 전략과 체계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2개사 내외로 오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밸류체인 협업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는 CVC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CVC 스케일업 펀드가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성립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좌)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엔터, 웹소설 2차 저작물 권한 뺏어

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

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 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립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SF 차단 위해 첨단드론·전문 포획단 투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식품부-환경부 공동 대책 마련
경북북부지역서 남하·확산 차단
광역울타리 출입문 자동화 등 추진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야산에서 상주시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 설치 및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확산이 우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드론과 야생멧돼지 전문 포획단을 투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확산하는 사태를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해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해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

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염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염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염전에 대해서도 타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환경부,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종 지정

히말라야산양 150종 유입주의종

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

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추석 앞두고 ‘친환경 위반’ 제품 집중관리

환경산업기술원, 백화점 등 특별점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26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백화점 및 온라인 매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이다.

기술원은 이번 집중 관리에 시장감시단 50명을 투입한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기 위해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한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결면이나 포장에 품목과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당·법률위반 생활화학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